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DOI: http://dx.doi.org/10.31008/MV.42.7

일반 논문

‘앵벌이 장애인’의 외침은 어디로 갔는가

1980~1990년대 영세 장애인 문제와 장애인운동의 대응

하금철 _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논문요약

1980년대 한국 장애인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노동권’이었고, 이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요구로 나타났다. 이 법률은 1989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수의 경증 장애인에 불과했고, 대다수 영세 장애인들은 노동시장 바깥의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그 때까지 앵벌이, 행상, 노점상, 야시장, 신문판매원 등으로 신문지상에 모습을 드러냈던 영세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운동의 핵심 의제가 아니었다.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1991년 9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 회장이 ‘앵벌이 장애인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이 존재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후 대대적인 ‘앵벌이 단속’이 이뤄지면서부터다. 이 사건은 행상·구걸 장애인들의 ‘밑바닥 조직’이었던 대한성인장애인복지협의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는 또한 기존의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들이 영세 장애인 문제에 연대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1995년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열사 장례 투쟁 이후 영세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운동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고, 장애인 노점상 운동 조직인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1990년대 후반 장애인 운동의 급속한 제도화·주류화 시도 속에서 조기에 청산되고 말았다.

■ **주요어:** 영세 장애인, 기생적 소비 계층, 앵벌이 사태, 장애인 노점상 운동,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1. 들어가며

장애인 운동이 일반적인 사회운동 담론 내로 진입한 시점은 1980년대 중반 이후였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는 광주항쟁 이후 다양한 민중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다. 이즈음부터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대학 진학의 문을 열고 들어간 장애학생들(주로 소아마비)은 학생운동, 민중운동의 강한 영향을 받아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들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이 당시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의제는 '노동권'이었다. 이들은 장애인이 소위 '정상적인'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어 시혜와 동정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판적이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양대 법안 투쟁'[1]으로 외화되었고,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으로 어느 정도 결실을 맺게 되었다(김도현 2007, 41-50).

이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만을 살펴보면, 이 법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할당제'가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경총을 비롯한 재계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왔다. 경총은 애초 법 제정 과정에서는 입장 표명이 없다가 1990년 8월 23일 상시 고용인원 100인 이상 사업장 의무 고용율 2%를 명시한 노동부의 시행령이 발표되자 발 빠르게 움직이기

1)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무의 대부분을 임의 조항으로 다뤘던 기존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전면 개정과 장애인 고용 할당제를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이 핵심 요구 사안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시작했다. 경총은 1990년 9월 4일에 '장애자 고용 관련 전문가회의'를 열고,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대해 의무 고용 대상 업체는 300인 이상의 사업체로 하고 그 비율을 1%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경총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그 결과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2%로 유지되었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업체의 상시 종업원 수는 30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장애인 노동권 운동의 역사는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바는 장애인 고용할당제가 기층 장애인 다수를 포괄하는 제도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장애계의 입장은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편입을 보장하라는 것이었고, 재계는 이 요구를 최소한으로만 수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체적 손상이 적고 노동능력을 가진 소수의 경증 장애인만을 선별적으로 고용하고자 했다. 재계가 가진 이 원칙은 사실 의무 고용 대상 업체와 의무 고용율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시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에 의해 촉발되고 재계와 정부가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형성된 노동권 담론하에서 소수의 경증 장애인을 제외한 기층 장애인 전반은 이 제도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대다수의 장애인은 여전히 노동시장 바깥의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한국의 장애인 운동사를 처음으로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는 김윤정의 연구는 장애인 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한 계기를 1981년

유엔의 ‘세계 장애인의 해’ 선언과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으로 보고,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구체적인 권리보장운동을 펼쳤던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이 등장했다고 설명한다(김윤정 1997). 이러한 입장은 이후 대부분의 장애인 운동사 서술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서술은 장애인 운동을 거시적인 제도의 변화와 일반적인 사회운동 발전 과정에 따른 종속변수로 인식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난 장애인의 삶과 목소리는 보편적인 권리 담론, 특히 ‘노동권’의 담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 나름의 독자적인 역사와 맥락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역사 서술에 의해 가려진 장애인 운동의 역사를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살아간 영세 장애인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복원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 경제 부문’은 특정한 직업이나 지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주로 앵벌이, 행상, 노점상, 야시장, 신문판매원 등의 모습으로 신문지상에 등장했다. 언론에서는 이들을 통칭해 ‘영세 장애인’이라 불렀다.[2] 정부는 88년 서울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 행사들을 앞두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들을 단속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쫓기에 바빴다. 그러나 당시 존재하던 어떤 사회운동 영역에서도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 이들의 생존 양식은 전통적인 도시 빈민 운동의 영역이라 할 수도 있지만, 1970년대 이래로 도시 빈민 운동의 주

2) 여기서의 영세 장애인은 대부분 지체장애인들이었다. 이하 본문의 논의 역시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된 관심사는 빈민가 철거 및 재개발에 맞선 주거권 투쟁과 새로운 정착지 건설이었지, 비공식 경제 부문 자체를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다(빈민운동사 발간위원회 2017). 1980년대 민중운동의 영향 아래 성장한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자기 운동의 과제로 만들어낼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고, '양대 법안 투쟁'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주되게 고민되지 못했다.

오히려 영세 장애인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던 집단은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조직 기반을 넓혀나간 '이익 추구형' 장애인 단체들이었다. 이들은 영세 장애인들을 조직의 인적 기반으로 삼아 지하철 신문 판매, 야시장 상권 등을 비롯한 각종 이권 사업을 따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권력의 요구에 순응해 갔다. 그러나 이권 사업 그 자체가 목표인 이들 이익 추구형 단체들은 영세 장애인의 근본적인 생존권 요구를 실현하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이로 인한 갈등은 가장 대표적인 이익 추구형 장애인 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장기철 회장이 1991년 9월 이권사업 확장을 노리고 '앵벌이 장애인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이 존재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터져 나왔다. 이로 인해 대대적인 '앵벌이 단속'이 이뤄졌고, 이는 실제 행상, 구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영세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영세 장애인들의 밑바닥 조직이었던 대한성인장애인복지협의회는 단속에 거세게 반발했는데, 이는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끼쳐 영세 장애인 문제에 연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후 1995년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열사 장례 투쟁을 거치면서 영세 장애인 문제는 청

〈표 1〉

성명	출생년도	1980-1990년대 주요 활동	현재 활동	면담 장소	면담 일시
조성남	1967	전북 장애인 청년조직 '동틀녘' 대표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활동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성동센터 사무실	1차: 2019.10.11 2차: 2020.02.05*
김종환	1967	장애인복지신문 기자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활동	정태수열사 추모사업회	추모사업회 사무실	1차: 2019.02.21 2차: 2019.05.22 3차: 2019.12.17*
김병태	1965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 멤버	안산 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안산 선부역 근처 카페	2019.07.17
박경석	1960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조직국장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노들장애인야학	2019.09.22
이태곤	1963	장애계 월간지 '함께걸음' 기자	함께걸음 편집장	함께걸음 사무실	2020.01.31*

*은 4.9통일평화재단 지원사업 종료 후 추가로 진행한 면담.

년 장애인 운동 조직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고, 장애인 노점상 운동 조직인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1990년대 후반 장애인 운동의 급속한 제도화·주류화 시도 속에서 조기에 청산되고 말았다.

본 논문은 그간 장애인 운동 역사에서 큰 주목을 받지 않았던 영세 장애인의 사회적 목소리와 이를 대변하고자 했던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의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당시 장애인 단체들이 생산한 각종 문건과 신문자료를 두루 검토했으며, 이 시기에 장애인 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를 면담한 구술 자료도 활용했다. 구술채록은 '1980-1990년대 장애인 운동 활동가의 삶과 기억'이라는 주제로 2019년 4·9통일평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재단의 지원 아래 동료 연구자인 문민기(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와 함께 진행했으며,[3] 지원 사업 종료 후 본 논문 작성을 위해 추가 면담도 진행했다. 구술자에 대한 개요는 〈표 1〉과 같다.

2. '이익 추구형' 장애인 단체의 형성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 현대사 속에서 가난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요구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표출해 왔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김도현은 "1970년대 말까지 한국에 개인으로서의 '불구자'는 존재했지만 사회 현상으로서 '장애'와 사회 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은 존재하지 않았다"(김도현 2007, 35)라고 한 바 있다. 1980년대에 등장한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언급이긴 하지만, 사회 집단으로서 장애인이 그 전에는 전혀 없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과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정치적 방향성의 옳고 그름을 떠나 1980년대 이전에도 분명 집단화된 장애인의 사회적 목소리가 존재했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상이군인(傷痍軍人)들이 보여준 행동들은 영세 장애인 문제를 고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공식적 담론장 내에서 상이군인의 몸은 '반공 성전'을 치러낸 명예로운

3) 문민기는 이 구술채록을 바탕으로 1980년대 장애인 운동과 관련해 별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몸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소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이군인에 대해 폭력, 구걸, 강매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정도로 이들의 삶은 열악했다. 상이군인이 겪은 폭력 경험은 전후에도 지워지지 않은 채 일상생활 속에서 재생산되어 갔고, 이로 인한 분노는 경찰조차 통제할 수 없는 과격한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승만 정부는 생계부조, 수용보호, 집단촌 양성, 직업 알선 등 원호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으나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 이에 몇몇 상이군인 단체는 비공식적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들이 개입한 이권사업으로는 미군부대 폐기물 처분권, 공설시장 관리권, 버스 배차 업무 등이 있었고, 때로는 정부가 요구하는 '청부 폭력'(판자촌 철거 등)에 적극 동원되기도 했다(이임하 2011).

1961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그해 11월 1일 '군사원호보상법'을 제정하여 제대군인,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 등에 대해 연금 또는 보상금, 조세 면제, 정착 자금 대부 등의 혜택을 주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원호 행정 체계를 정비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이군인을 '재건의 일꾼'으로 표상화하여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었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민간의 상이군인 원호 단체들을 해산시키고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새로운 원호 단체들을 조직했다. 이들 단체들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상이군인의 재활을 도모하는 것이었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의 반공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관변단체로 기능하기도 했다(박은영 20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상이군인 원호 정책은 한국의 복지정책의 시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목표는 원호 대상자의 수를 축소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상이군인이 국가의 지원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가는 그 대신에 일부 상이군인 단체에게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권을 배분했고, 상이군인 단체 역시 이에 순응하며 '이익 추구형' 단체로 변모해 갔다. 국가 복지정책의 공백 속에서 이러한 공모 관계는 다른 장애인 단체에도 확산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노골화되었다.

1980년 5월 광주학살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은 자신들의 정당성 결여를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구호로 덮고자 했다. 때마침 1981년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였고, 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을 앞두고 장애인복지에서 대외적 성과를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은 이런 맥락에서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임의조항으로만 구성된 것에 불과했다. 오히려 장애인의 '몫'은 복지정책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져 분배되고 있었다. 1980년대에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 외에도 '국풍81'[4]과 같은 대규모 관제 축제가 성행하기도 했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지하철이 확장되는 등 도시개발이 붐을 이루는 시기이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이러

4) 1981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두환 정부가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주최한 관제적 성격의 문화축제다. 이는 1981년 초 청와대 정무제1비서관이었던 허문도가 5·18 1주기를 앞두고 군사정권에 대한 학원가의 저항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전국 194개 대학의 6,000여 명의 학생들과 전통 민속인 및 연예인 등이 참여해 총 659회의 공연을 벌였고 주최 측 통산 1,00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이 행사에 참여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자활지원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장애인 단체에게 몰아주었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이 각종 이권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이권사업으로 대두된 것은 지하철 신문판매였다. 서울지하철공사는 1976년 부녀복지연합회를 시작으로, 1981년 어린이재단, 1984년 장애자재활협회와 지하철 신문판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로도 한국농아복지회, 한국보훈복지재단, 경우장학회 등과 장기 수의계약 형식으로 신문판매권을 넘겼다. 지하철공사는 이들 단체가 '공공성 및 사회사업의 충실도에서 우수한 사회단체,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전국 범위 사회복지단체, 수익금 전액을 사회사업에 쓰는 서울시 지원단체'라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987년 한 해에만 위 여섯 개 복지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4억 원을 넘길 정도로 사업 규모가 상당했고, 실제 사업이 운영되는 구조는 여러 단계의 도급구조를 통해 말단의 신문판매원이 착취되는 형태였다. 특히 복지단체가 개별 신문판매원과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영업부장'이라는 이름의 판매업자가 끼어서 상당한 수익을 챙겨갔고, 판매원의 신분 역시 고용관계가 아니라 복지단체의 회원이라는 형식으로 묶여 있었다(함께걸음 1990/11, 20-27).

1981년 10월에 창립된 '신체장애인복지회'의 경우, 유신헌법 제정 작업에 참여하고 공화당 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한태연이 회장직을 맡았다. 이 단체는 창립 직후부터 지하철 자판기 운영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월 수익이 경비를 제하고도 1,500만 원에 달했다. 이후에는 '장애인 단체'라는 명의만 빌려주고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는 방식의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데, 포항제철 고철 사업, 수의계약을 통한 한국전기통신공사 용접봉 납품, 유령회사 설립을 통한 매장 분양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장애인 등록제가 전면 시행된 1988년 이후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도용해 유령 회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세를 키운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함께걸음 1992/09, 16-25).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장애계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단체로 한국지체장애자협회(이후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개칭. 이하 지장협)가 등장한다. 지장협은 사업가 출신의 중도장애인인 장기철 씨가 주도해 만들어진 단체다. 그는 광주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다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후 장애인복지를 표방하며 1981년에 무등복지회라는 새마을금고의 전무로 일을 했다. 1983년에는 한국장애자재활협회 전남지부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장애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장애인복지신문 1991/11/29). 그러던 중 1986년 재활협회 주선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지체장애인 관련 중앙 단체 결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임시 회장으로 한 장애인 단체 소속 비장애인이 선임되었다. 이에 장기철은 '장애인 단체 회장은 장애인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걸어 임시 회장을 밀어내고 지장협의 초대 회장이 되었다. 그는 상당한 사업 수완을 가진 인물로, 장애인 종합예술제를 개최하면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기업 후원을 끌어내기도 했고, 공중전화 부스 상단광고 부착사업 및 장애인전용 운전학원을 추진하는 등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갔다. 또한 지장협은 설립 초기부터 집권당인 민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함께걸음 1992/01, 10; 함께걸음 1991/12, 4;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6).

이처럼 전국단위 장애인 단체들이 수익사업에 뛰어들자, 지역 단위의 단체들도 이에 가담하게 된다. 지역 단위 단체들이 개입했던 수익사업 중 주목해 볼 것은 '불우장애자 돕기' 등의 명분을 내세워 열리는 '야시장'이다. 야시장의 시초는 '국풍81'의 부대 행사로 열린 '팔도 명산물 시장'과 '팔도 미락정'이었다(중앙일보 1981/04/27). 야시장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자 장사가 되겠다고 판단한 전문업자들은 주로 공유지나 하천가, 역 주변 공터 등에 야시장을 열어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공유지나 하천가를 점거해서 야시장을 여는 것은 도로관리법, 하천법상 불법이었다. 이 때문에 전문업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야시장을 열 수 없었고, 상이용사 단체를 내세워 '불우 상이용사 돕기'를 명분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따냈다. 이후에는 명분이 '불우장애자 돕기'로 옮겨갔고, 여러 장애인 단체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따내주는 명목으로 업자들에게서 사례비를 받아 챙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구청의 허가가 여의치 않으면 읍소를 하거나 뇌물을 건네기도 했고, 때때로 폭력도 행사했다. 또한 야시장 철거를 막기 위해 재가 장애인들이 1만~2만 원의 일당을 받고 동원되기도 했다(함께걸음 1991/05, 4-9).

이러한 관행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장애인 조직에 의해서 이뤄지기도 했다. 소위 '정상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영세 장애인 스스로가 생계를 위해 시혜와 동정으로 유지되는 이런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일례로 1990년 8월 장애아를 맡길 시설을 알아봐 주는 명목으로 사례비를 받은 것이 뒤탈이 나 언론에 공개된 '대한신체장애자자립회'(이하 자립회)를 들 수 있다. 자립회는 대규모 빈민가인 서울역 앞 양동 부근에 모여 살던 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인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들이 1980년에 결성한 단체이다. 1985년 서울시의 남대문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힐튼호텔이 들어서면서 근거지가 철거되자 시각장애인들은 상계동 성모자애재활원으로 거처를 옮겼고, 지체장애인들은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중계동 천애재활원에 집단 거주를 하게 되었다. 자립회는 그 동안 구걸·행상부터 시작해서 병풍과 청소도구 제작 납품 사업, 청바지 물을 빼는 세탁 사업 등을 했고, 때로는 채무관계에 개입해 빚을 대신 받아주고 수고비를 받는 일도 했다. 이들 역시 야시장 사업을 했는데, 야시장 허가 문제로 행정 당국과 마찰을 빚어 이 단체 회장이 전과 8범이 되기도 했다(함께걸음 1990/08, 30-33).

기존 연구들은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의 장애인 단체 형성 흐름에 대해 비장애인 전문가 또는 장애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명망가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김도현 2007; 김윤정 1997; 유동철 2017).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이들 단체가 표면적으로 내건 목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 단체의 생존을 유지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이군인 원호 정책부터 장애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공적부조는 상당한 공백이 존재했다. 그 대신 국가는 비공식적으로 일부 단체에게 이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담합 구조를 만들었고, 장애인 단체 역시 이러한 틀 내에서 생존권적 요구를 제기하면서 일종의 '이익 추구형' 단체로 자리 잡아갔다. 또한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빈번하게 폭력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때 배분되는 이권은 지하철 신문판매, 자판기 운영사업, 야시장 노점 등 불안정한 도시개발의 부산물이었지만,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에게는 그나

마 매력적인 생계 자원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생존권은 비공식적 담합 구조의 최말단에서 손상된 신체의 열악한 이미지를 가시화하는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었다. 또한 큰돈이 되는 수익사업은 보통 정부 위탁사업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가 이를 따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애인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 때 개별 장애인은 사업의 효과를 증명해 보일 '숫자'로서 동원되는 대상이 될 뿐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큰 권력을 가진 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바깥에서 생존을 유지해야 했던 대다수 기층 장애인의 삶에 만연해 있던 것이었다. 즉 '장애인은 불쌍하다'는 세간의 인식과 '떼를 쓰면 된다'는 경험을 통해 습득한 생존 방식을 적절히 이용해서 살아간 것이다(이태곤 1차 구술).

3.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의 빈민 의제에 대한 인식

이어서, 1980년대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들이 형성된 배경과 이들의 영세 장애인 및 빈민 의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의 태동은 정립회관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정립회관은 한국소아마비협회가 1975년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장애인 지역사회 이용 시설이다. 설립 초기에는 주로 서울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소아마비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1~2달에 한 번씩 정립회관 버스가 서울 각 권역을 돌아 학교에서 소아마비 학생을 태워가서 사격, 양궁, 수영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을 지도했다. 이를 통해 친목이 형성된 장애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모닥불', '하나공', '밀알'과 같은 서클을 만들어 활동했다. 그리고 '밀알' 출신 멤버 중 일부가 대학 진학 후 학생운동을 경험하면서 장애인 운동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결국 밀알 출신 멤버 10여 명이 초동 주체가 되어 1986년 9월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를 창립하게 된다.

사실 정립회관은 육영수 여사의 후원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국민일보 2013/01/28), 그런 만큼 정치적 색깔을 내기 어려운 곳이었고 그저 '장애학생들의 쉼터' 정도의 기능을 했던 공간이다. 그러나 이 공간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친목 형성 과정에서 장애인으로서 자의식을 키워가는 한편, 저항적 사회운동의 정체성도 함께 키워갔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1984년 김순석의 죽음과 이에 대한 정립회관 이용 대학생들의 대응이다. 그해 9월 19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김순석(당시 34세)이 도로의 턱을 없애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셋방 작업실에서 만든 악세사리를 남대문시장에 납품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그가 남긴 유서는 조선일보에 대서특필 되면서 나름 큰 파장을 일으켰다.[5] 보도가 나간 지 보름 만인 10월 6일 정립회관 운동장에서는 보건사회부 장관과 국회의원 및 장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전국 지체부자유학생체전 개회식이 열리고 있었다.

5)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 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까?"(조선일보 1984/09/22)

이 때 정립회관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학정립단 등 청년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김순석의 모의 관을 메고 들어와 장례식을 치렀으며, 내빈들이 자리를 잡고 있던 단상에 기습적으로 올라가 장관에게 문상을 요구했다. 대학생들이 관을 태우는 화장식을 거행하자 결국 개회식 행사는 파행적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김도현 2007, 37).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 장애 대학생들의 시위가 기존 장애인 단체가 보여줬던 '이익 추구형' 관행을 극복하는 시도였다는 점 때문이다. 장애 대학생들은 김순석 사건에서 장애 대중의 암울한 미래를 보았고, 그가 처한 사회적 조건을 극복하는 것을 사회적 소명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그들은 소수의 장애인에게 특혜성 생계 수단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기존 관성을 넘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보편적 권리 담론'으로 표현해 내고 그 책임을 국가에게 묻고자 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1989년 5월 울림터 산하 문화부 마당패가 김순석의 삶과 죽음을 소재로 이화여대와 단국대에서 무대에 올린 '5장인생'이라는 공연이다. 이 공연은 "김순석 씨의 삶은 어느 특정한 장애인의 삶이 아닌 전체 장애인의 삶"이며 "김순석씨의 죽음은 단순히 비관자살로 치부되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의 죽음은 "억눌리고 짓밟히기만 했던 장애인들의 자기해방의 몸부림"으로 해석되었으며, "불평등한 삶과 시각을 만들어 놓은 사회인들, 서울시장, 보사부장관"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다(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 1993, 88).

한편 울림터 외에도 전국적으로 장애 대학생의 조직화 움직임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1982년 전국 5개의 장애 대학생 동아리가 모여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전지대련)'를 결성했다. 이후 전지대련은 조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을 확장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조직의 위상을 갖추었다. 울림터 역시 1987년에 전지대련에 가입했다. 울림터의 가입을 전후로 하여 전지대련은 친목모임에서 운동적 지향을 갖는 조직으로 발전했다(김도현 2007, 63). 이런 움직임은 장애인 운동의 독자적 성장이라기보다는 당시 급진적 학생운동·민중운동의 성장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청년 장애인 조직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1988년도부터이다. 당시 장애계는 1987년 말 대선을 앞두고 소위 '양대 법안 투쟁'을 본격화했고, 울림터 등 청년 장애인 조직들도 이에 적극 개입했다. 한편 청년 장애인 조직들은 88서울장애자올림픽을 장애인 복지와 무관한 전시성 행사로 규정하고 '장애자올림픽 거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장애자올림픽 거부'는 단순히 이념적인 반정부 구호만은 아니었다. 장애자올림픽에 대한 실제적 불만이 표면화된 것은 1987년 5월 26일에 벌어진 장애자올림픽 선수 구타 사건이었다. 보라매공원 안 재활협회에서 훈련 중이던 선수 60명은 '침대 시트를 갈아 달라', '훈련장이 부족하다', '응급 약품을 구비해 달라', '세탁물을 위해서 탈수기를 구입해 달라' 등 운동선수로서는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협회 측에 전달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정신 상태가 썩었으니 퇴촌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에 선수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가두시위에 나섰으나 전경들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 1987a). 장애자올림픽은 정권이 야심 차게 준비한 국가홍보 수단이었지만, 장애인 선수들은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무대 위에 올려지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것이다.[6)]

장애자올림픽에 대한 본격적인 저항은 1988년 3월 28일 연동교회 점

거농성에서 터졌다. 순복음교회에서 거둔 부활절 예배 헌금을 장애자올림픽 지원금으로 기부하려 하자, 송인학 등 20여 명의 장애인들은 장애자올림픽이 아니라 영세 장애인을 지원해야 한다며 종로구의 연동교회를 점거하고 단식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울림터 등 청년 장애인 조직들이 동조 농성과 연대를 이어갔고, 4월 16일에는 명동성당 앞에서 '장애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라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삼육재활원 재활의학과 점거 농성이, 7월 2일에는 장애자올림픽조직위 점거 등이 이어졌다. 이러한 실천들은 궁극적으로 '양대 법안 제·개정'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수렴되었다(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 1993).

청년 장애인 조직들은 이 투쟁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노동권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바탕으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현실을 강하게 성토했다. 아래 글은 장애인 노동 현실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 "재활원에서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면 무얼 하겠나? 취직이 안 되는데…",
> "86년까지 대학에서 장애자를 거부하는 사태, 또한 공무원 시험 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장애자에게 불리하도록 만든 법인데 미국의 경우

6)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만을 울림터는 이렇게 표현했다. "선수들은 직장도 잠시 쉬고 생계에 위협을 감수하면서 오직 선수가 되고 싶어 올라왔으나 이들에게 대하는 식은 한마디로 할 일이 없어 집에서 노는 놈이니 이것도 과분하다는 이때까지의 합숙 훈련 그대로의 사고를 답습하는 인상이다"(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 1987a).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장애자가 합격하면 취업 1순위라고 하니 가히 비교가 된다."

"아시안 게임 때 생긴 일인데, 이태원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토산품을 파는 노점 장수들이 꽤 있는데 한국에 병신들 투성이라고 소문 날까 봐 장애자 노점 장수들을 몽땅 철수시킨 일이 있다 한다. 또한 88 올림픽 때 국가 체면상 장애자를 쓸 수 없다고 자격증 있는 맹인 안마사와 침술사를 제껴두고 새로이 정상인들을 양성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 1987b).

청년 장애인 조직들은 이런 장애인의 처지를 '기생적 소비 계층'이라는 용어로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이 용어는 당시의 청년 장애인 조직의 성명서, 각종 팜플렛 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80% 이상이 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나마 취업 장애인의 90%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후된 저급한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결국 장애인들은 빈민계층, 기생적 소비 계층으로 전락**되고 교육, 의료, 재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오는 정신적 소외감으로 인하여 2중의 아픔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강조는 인용자.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 1988a).

그러나 이러한 현실 인식과 실제 이들이 벌인 투쟁의 방향에는 다소 괴리가 존재했다. 무엇보다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영세 장애인에 대한 현실 인식은 이념적 수준에서 뒷받침되고 있지 못했다. 1980년대 청년 장애인 조직이 가진 장애인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그 당시 다른 사

회운동이 그렇듯이 광주항쟁에 대한 원죄 의식과 군부독재 정권에 대한 적개심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만든 억압적 정치·경제구조가 장애인의 열악한 삶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장애자 문제가 특별히 장애자들의 것만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자 문제는 이 시대를 함께하는 전체 민중들의 문제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이의 원인은 사회 제반 모순 구조, 즉 지배집단의 반민중적, 비민주적 성격으로부터 그리고 외세의 힘에 의존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반민족적 속성에 기인"한다고 파악했다(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 1986). 이는 당시 시대적 조건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장애인 운동을 전체 민중운동 속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운동으로 사고할 수 없도록 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당시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이념적 혼란이 있었지만, 딱히 이를 해소할 만한 충분한 이론적 자원이 없었다. 아래 1980년대 말부터 전북 지역에서 청년 장애인 조직 '동틀녘'을 이끌었던 한 구술자의 말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면담자: 당시 (청년 장애인 조직 내에서 사회과학 세미나를 할 때) 장애와 관련해 가지고 읽을 만한 거리들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구술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과학 도서를(에서) '노동자'(라는 단어)를 '장애인'으로만 바꿔서[강조는 인용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담자: 근데 그게 (활동가들 사이에서)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

구술자: 문제제기가 많아요. 그렇게 바꿔서 했을 때, 장애인이 실제로 잉여생산을 할 수 있냐, 이런 문제부터 해서. 자본을 분배하는 과정에 장애인이 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만큼 기여도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치열한 문제제기들이 있었죠.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자본론』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애인은 이념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엄청 있었고.

면담자: 거기서 이념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들이 나올 만한 것들이 있었나요?

구술자: 결론은 그런 거였던 거 같아요. 장애인의 문제를 (…) 결국 사회적 문제다. 사회가 예방 차원의 대응을 못한 거고, 그 시기를 보면 6·25 이후고, 남한에서 예방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것 보다는 경제 중심으로 가면서 장애인들이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국가는 계속 보고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은 냈죠 우리가.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권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거.(조성남 1차 구술)

위와 같은 이념에 따라 본다면 장애인은 자본주의화 과정 또는 전쟁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의해 불가피하게 출현하는 부수적 산물로 이해될 뿐이다. 따라서 대다수 장애인, 특히 행상이나 구걸 등을 하며 살아가는 장애인은 바람직한 계급적 위치인 '노동자'에 아직 이르지 못한 자로 인식된다. '기생적 소비 계층'이라는 표현 역시 이러한 인식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7]

7) 다음의 인용문이 '기생적 소비 계층'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를 잘 보여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규정됨으로써 노동력의 결핍이나 부분적 결여는 노동시장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체적 이상을 가진 장애인들은 노동상품성을 갖지 못하여 비자립적 인간 혹은 기생적 소비 계층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 1988b).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고용촉진법'제정 운동의 기반이기도 했다. 이는 장애인 운동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자리잡는 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장애인을 자본주의 노동시장 내로 편입시킬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는 본 논문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계가 내세우는 시장 논리에 의해 최소한으로 억제된 채 제도화되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근본적인 잘못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 소극적인 정부와 재계에 있지만, 운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장애인 운동 역시 시장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최종적으로 제도화된 '장애인고용촉진법'하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애 정도가 경증인 장애인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여러 문건 등을 살펴보면, 울림터를 비롯한 1980년대 청년 장애인 조직들이 '장애 대중'을 '빈민 대중'과 사실상 동의어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운동 주체의 현실적 조건상 이런 인식이 실제 투쟁으로 외화되기는 쉽지 않았다. 당시의 장애인 운동의 주체들은 대부분 소아마비 장애인이었고, 학력도 대졸 또는 적어도 고졸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들 역시 장애로 인한 차별과 좌절을 겪었지만, 현재의 경제적 수준 또는 향후 기대 수준이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는 자본주의 노동시장 내부로 진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이런 기대를 갖기 더 어려웠던 대다수의 '영세 장애인' 문제는 운동의 시야 밖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개별 활동가 차원에서 마치코바(町工場: 소규모 공장)에 고용되어 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임금으로 착취당하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노동자들을 조직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김종환 2차 구술; 김병태 1차 구술; 조성남 1차 구술) 또한 전북 지역 청년 장애인 조직 '동틀녘'은 이리시 귀금속 공단의 장애인 노동자들을 회원으로 조직하기도 했다(조성남 1차 구술). 그러나 이런 활동은 고용할당제로 대표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제정 운동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고, 장애인 운동 내에서 주류적 흐름이었던 것도 아니다.

한편,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들은 양대 법안 투쟁 이후 별다른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채 1990년대를 맞게 되었고, 전국 규모의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을 건설하고자 했던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결국 1993년에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의 전국적 확장을 도모하던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가 소아마비 치료로 유명한 여수 애양병원 출신 환우들의 모임이었던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로 통합되었다. 이에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은 대중적 기반을 가진 새로운 조직으로서 재도약을 도모하게 된다.

4. 1990년대 영세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주목과 장애인 운동의 대응

1) 이른바 '앵벌이 사태'

1990년대 초반, 영세 장애인 이슈는 소위 '앵벌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지장협 장기철 회장이 1991년 9월 20일 경찰청을 방문해 "지체부자유자들을 집단수용, 구걸을 시킨 뒤 돈

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이 있다"고 제보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데서 발단이 됐다. 장기철은 "88년께부터 서울시내 남대문시장, 명동일대는 물론, 부산·대구 등 대도시 중심가에서 두 다리가 잘린 장애인들이 구걸행위나 물건 강매행위를 하는 일이 부쩍 늘어 협회회원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이들 상당수가 강제수용 된 채 매일 아침 봉고차에 실려 시내 중심가로 나와 구걸 행위를 한 뒤 수용시설로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의 자체 조사로는 그 수용시설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없어 이번에 경찰에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렇게 폭력조직에 갈취당하는 장애인의 수가 전국에 400~6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가출 청소년을 꾀어 멀쩡한 사지를 고무줄로 2주가량 꽁꽁 묶어 불구로 만든 뒤 '앵벌이'로 나서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라고도 했다(경향신문 1991/09/25; 한겨레 1991/09/26). 그의 폭로는 여러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 갑작스러운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로 대대적인 실적 위주의 치안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이 선언의 명분은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이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도시 하층민의 경범죄가 주된 단속의 표적이 되었다. 이에 더해 1991년 3월 26일 대구에서 초등학생 다섯 명이 집단 실종되는 사건(일명 '개구리 소년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치안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폭력조직이 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앵벌이로 둔갑시켜 갈취한다는 장기철의 폭로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경찰청은 장기철의 수사 의뢰 후 단 4일 만인 2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각 시·도 경찰에 지체부자유자들을 집단 수용, 구걸을 시킨 뒤 돈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에 대한 일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장기철의 수사 의뢰는 얼마 안 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애계 월간지『함께걸음』은 그해 12월 보도에서 지장협의 장기 사업계획을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철은 1990년 2~5월 사이 지하철 내의 신문가판대와 간이매점의 이권을 따내기 위해 불우장애인 자활자립 기금 조성계획이라는 명목하에 지하철공사를 들락날락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한 그의 수사 의뢰 역시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 내 부대사업 이권을 겨냥한 작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함께걸음 1991/12, 4). 이에 앞서 11월 19일에 방영된 MBC 'PD수첩'에서도 앵벌이와 폭력조직 연계설을 일축하는 보도를 냈다(MBC PD수첩 1991/11/19). 그러나 행상·구걸 장애인에 대한 갈취 행위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장 씨의 수사 의뢰 바로 직전에 부산동부경찰서가 가출 청소년 수십 명을 고용해 물품판매행위를 시키고 돈을 갈취해 온 이들 2명을 검거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경향신문 1991/09/09). 하지만 문제는 장기철의 폭로를 둘러싼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수사 의뢰로 경찰의 대대적인 앵벌이 단속이 이뤄졌고, 이것이 실제 행상·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던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것이다(장애인복지신문 1991/10/18). 당시 신문기사와 구술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행상·구걸 장애인들은 혼자서 하기 어려운 물품 운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장애인들한테 얼마씩 돈을 주고" 차로 옮기게 했는데, 이를 장기철이 폭력조직에 의한 갈취로 과장·왜곡했다는 것이다(이

태곤 1차 구술; 장애인복지신문 1991/10/04). 이에 장애인복지신문은 사설을 통해 장기철의 수사 의뢰 이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 폭력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폭력배가 장애인에게 구걸이나 행상을 시키고 이들 수입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갈취 또는 강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상이나 구걸을 하는 장애인은 범죄 피의자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상이나 구걸 장애인을 범죄인 다루듯 마구 연행하여 하룻밤씩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이해될 수 없다(장애인복지신문 1991/10/04).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비슷한 시기 경찰은 실종된 '개구리 소년'을 찾기 위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10월 23일 하루 동안 5만 5,000여 명의 경찰과 경찰헬기, 해경정 등을 동원해 6만 3,862명의 폭력범, 교통질서위반사범, 행락질서위반자, 살인·강도·강간범, 기소중지자 등을 적발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구걸 앵벌이 20명, 껌·신문팔이 20명, 가출 여성 24명, 기타 배회자 450명 등도 함께 단속했다(동아일보 1991/10/24). 즉, 장기철의 수사 의뢰는 이런 엄혹한 분위기에 불을 지른 격이 된 것이다.

고조되던 행상·구걸 장애인의 불만은 결국 지장협을 겨냥한 직접 행동으로 이어졌다. 직접적인 계기는 '폭력조직 연계설'을 일축한 MBC 'PD수첩'의 11월 19일 보도였다. 방송이 나간 다음날인 20일, 구걸·행상장애인들의 조직인 대한성인장애인복지협의회(이하 성장협)는 용산구 남영동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위치한 지장협 장기철 회장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장기철 회장이 폭력조직 운운하면서 근거 없는 소문만 가지고 수사의뢰를 한 이래 시민들이 우리를 마치 범죄집단의 하수인으로 여겨 장사는 물론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23일 오전 9시에는 성장협 회원 50여 명이 지장협 사무실 앞 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장기철 회장의 사퇴와 영세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장협 사무실에서 끌어낸 소파와 자신들의 승용차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쳤고, 몇몇 장애인은 몸에 석유를 뒤집어쓰고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설 경우 분신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경찰은 11시경부터 소방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며 강제 진압에 돌입해 다수의 장애인을 강제 연행 했다(함께걸음 1991/12, 4).

성장협이 농성에 들어간 직후부터 장애인 단체들의 연대도 이어졌다. 21일 오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농성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천안인애학교 공대위도 장기철 사퇴와 영세 장애인 생계 대책 쟁취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져, 1991년 12월 4일 성장협, 전국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건설주비위원회,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회원 150여 명이 남부장애자종합복지관 강당에 모여 '영세 장애인 생존권 쟁취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결의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40여 대의 차를 몰고 국회, 민자당, 민주당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차량 시위를 벌였으며, 김대중 당시 민주당 공동대표와 면담을 갖고 영세 장애인 생계 대책 보장 요구를 전달했다(함께걸음 1992/01, 48).

'앵벌이 사태'로 인해 장기철은 장애계 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 처음에는 "나는 폭력조직만 잡으라고 그랬지, 경찰에 단속을 하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거나 "농성 장애인들 중에는 폭력조직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장애인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함께걸음 1992/01, 48). 그러나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장기철은 어쩔 수 없이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지장협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그는 1993년에 다시 회장직에 복귀했고, 2005년에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회장직을 유지했다.

'앵벌이 사태'의 중심에 서 있었던 성장협은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과는 무관한 단체였다. 오히려 성장협의 구성원 중 일부는 지장협에도 멤버십을 갖는 경우가 있었고(김종환 3차 구술) 이권 사업을 쫓는 방식에 있어서 유사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앵벌이 사태'와 같은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장협 내의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성장협은 그야말로 구걸·행상 등으로 살아가는 기층 영세 장애인들로 구성된 '밑바닥 조직'이었다.[8] 이들은 거리 행인들의 시혜와 동정에 의존해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지장협을 상대로 벌였던 것처럼) 때때로 과격한 행동도 불사했다. 그러나 이들의 과격 행동은 가치 지향적 성격을 가진 여타의 사회운동이 구사하는 직접 행동(direct action)과는 분명히 달랐다. 따라서 1980

8) 한 구술자는 성장협이 그 전부터 존재했던 단체가 아니라 '앵벌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조직된 것이라 말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렵다(이태곤 1차 구술). 당시 기사를 통해서도 성장협의 조직 배경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대표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나마 확인되는 바는 성장협이 2008년 4월 28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임명 과정에 반발하여 농성을 벌였다는 사실 정도인데(에이블뉴스 2008/04/28), 그 후 조직이 언제 해산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년대 민중운동의 영향 속에서 성장한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과는 문화적으로 이질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의 활동가들은 '앵벌이 사태'로 표면화된 이들의 권리 주장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계기로 연대 관계를 맺게 되었다. 물론 그 연대가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영세 장애인의 목소리가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과 만나는 계기로서 '앵벌이 사태'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시 신문기사로만 전해질 뿐, 현재 장애인 운동사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앵벌이 사태' 자체가 지장협과 성장협이라는 조직 간의 다툼으로 비춰졌다는 점과 성장협의 행동이 그간 사회운동의 문화와는 이질적이라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거리에서 시혜와 동정에 의지해 생존을 이어가야 했던 영세 장애인들의 날것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다시 조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들조차 구호로서만 영세 장애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 실제로 조직화된 영세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접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반면, 이 사건 이후로 영세 장애인들의 권리 요구는 장애계 내에서 독자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다. 1992년 1월 21일 구로공단역 앞에서 앵벌이를 하던 지체장애인에게 단속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앰프를 파손한 일이 발생하자, 성장협은 다음날 구로구청에 찾아가 항의하고 구청 관계자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장애인복지신문 1992/01/31). 또한 7월 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50대 지체장애인 박승학이 계속되는 노점 단속을 못 이겨 상일동 근린공원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성장협을 비롯한 4개 장애인 단체가 공동으로 장례위원회를 꾸리고,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다(장애인복지신문 1992/07/03; 장애인복지신문 1992/07/10). 한편,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는 서울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20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영세 장애인 빈곤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1994). 이 연구는 그 전까지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상징되던 노동권 의제로는 충분히 포괄되지 못했던 장애인 빈곤 문제를 독자적 의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회는 이를 통해 영세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 시책 신설을 촉구하는 한편,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취로사업 유형 확대 △지하철 가판대 등에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우선 배치 △영세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위한 현실적 융자 제도 마련 △지역 단위 관공서 등의 일반 소비재를 생활보호 장애인들이 모여 생산·납품하는 자립 작업장 개설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중증 및 빈민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방향으로 개정 등 장애인 노동 관련 대책도 제시했다.

2)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의 죽음과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결성

'앵벌이 사태'로 인해 돌발적으로 장애계에 모습을 드러낸 성장협이 다른 장애인 단체들의 활동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것은 아니었다.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이 영세 장애인 문제를 확실한 자기 과제로 인식하고 활동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 그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성장협 회원이었던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의 죽음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1995년 3월 8일 오전, 노점상에 필요한 스피커와 배터리를 서초구청 단속반에게 빼앗긴 최정환(당시 37세, 지체장애 1급)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압수당한 물품을 찾으러 구청 당직실로 갔으나 심하게 모욕을 당하자, 미리 준비해 간 시너를 온몸에 끼얹고 분신했다. 얼굴 3도, 신체 2도, 전신 88%의 화상을 입은 최정환은 인근 병원의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삼륜 오토바이를 이용한 카세트테이프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 오던 최정환은 1994년 7월에도 구청의 단속반에게 폭행을 당해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적이 있다. 최정환의 분신 소식이 알려지자 성장협,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이하 전장협), 전국노점상연합회(이하 전노련)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례투쟁을 벌였다. 최정환이 3월 21일 끝내 숨을 거두자, 대책위는 장례위원회로 전환되고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규모 장례를 불허하며 영안실을 봉쇄했고, 장례위원회는 시신을 생선 판매 트럭에 숨겨 연세대로 옮기려 했으나 경찰에게 시신을 빼앗겼다. 우여곡절 끝에 장례는 용인의 장지에서 소수만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지게 되었다. 한편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연세대에 집결해 있던 2,000여 명의 노점상, 장애인, 사회단체 회원, 학생들은 장례식 봉쇄에 항의해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김도현 2007, 78-80).

김도현은 최정환 열사의 죽음 이후 전개된 투쟁에 대해 "1990년대 들어 약화되고 분산되어 있던 민중 운동권이 새롭게 결집하는 계기"(김도현 2007, 79)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장례위원회는 장애인·노점상 단체뿐 아니라 노동·통일운동·학계·학생운동 등을 망라한 연대체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장협은 이후 장례 투쟁을 평가하면서 "전노련과는 내용적인 연대를 고민할 정도로 성과를 남겼으며 전국연합 등 여러 민민운동단체들이 장애인 문제로 고민을 확대하고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로 움직이려 했다는 성과를 남겼다"고 자평했다.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과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행상·구걸 장애인 조직인 성장협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반목과 질시의 관계로 보기보다는 아직까지 장애인 운동의 세력이 난립되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며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며 연대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1995).

이러한 연대의 성과는 곧장 새로운 실험으로 나아갔다. "4백만 장애인을 위해 복수해 달라"라는 최정환 열사의 유언을 받아, 이전까지는 전혀 시도해 보지 않았던 '노점을 통한 장애인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전장협과 전노련이 공동으로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이하 장자추)를 결성하고, 노점으로 생계 활동을 이어가면서 장애인 운동을 병행하는 활동을 벌인 것이다. 전장협은 조직 내에 장자추 활동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1995년 5월 노점분과를 설치했다.[9] 장자추의 실제 활동은 그에 앞서 이미 4월부터 시작되어, 서울 중구 청계8가 삼일아파트 13동 앞에서 노점 자리를 확보하고 장사에 들어갔다. 이후 삼일아파트 20동 앞까지 진출했으며, 동서울터미널, 동대문 경동시장 등으로 확장해 나갔다(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2002, 10).

9) 장자추의 정확한 발족 일자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1995년 3월 최정환 열사투쟁, 4월 삼일아파트 노점 자리 확보, 5월 전장협 내 노점분과 설치.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장자추 회원들에게는 운동적 목표도 중요했지만, 노점상은 무엇보다 당장의 생계 해결의 수단이었다. 그 전부터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에서 활동을 해오다가 장자추에 결합하게 된 활동가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조성남 1차 구술; 김종환 3차 구술).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들은 2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되었고 당장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 중 일부는 장애인 고용할당제로 열린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대졸 학력을 갖춘 이들이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직업을 통한 생계대책을 갖지 못한 일부 활동가들은 불법 다단계판매(MLM: Multi-Level Marketing)에 뛰어들어 조직적인 파문을 낳기도 했다(장애인복지신문 1993/05/14). 게다가 1990년대 사회운동 쇠퇴의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 운동의 변혁적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운동의 대의, 명분만으로 활동가들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자추는 무엇보다도 활동가들의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길로 여겨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1990년대를 통틀어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 가장 치열했던 열사 정국 속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운동적인 명분도 충분했다.[10]

물론 여기에는 단순한 생계 목적 이상의 의미도 있었다. 당시 영세 장애인들에게는 취업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취업이 된다 해도

10) 전장협 노점분과장이었던 조성남은 개인적으로 생계 문제 해결이 시급하지만 활동가로서의 삶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젊은 활동가들이 장자추에 많이 뛰어들었다고 회고했다(조성남 2차 구술).

가내수공업 수준의 공장에서 용돈 정도 되는 임금을 받으며 착취당하기 일쑤였다.[11] 한편 종교단체가 세운 미인가 시설이 이들에게 주거와 생계의 터전이 되기도 했다. 1980~1990년대에는 종교단체가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장애인 공동체를 만들었다면서 함께 살 장애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고, 생계가 막막한 장애인들이 여기에 몰려들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망애재활원으로, 이 시설에 모인 장애인들은 낮에 시장이나 가정집을 다니면서 행상을 하며 살았다(이태곤 1차 구술; 함께걸음 1993/03~05).[12] 말하자면 소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 구걸·행상 등 비장애인의 시혜와 동정에 기대어 사는 편이 차라리 더 낫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던 것이다. 그에 비해 일정한 자리를 확보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노점'은 장애인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장애인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앵벌이로 떠도느니" 차라리 "같이 힘

11) 어린 시절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영세 장애인의 삶을 살았던 이태곤은 자신을 포함한 영세 장애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저처럼 가내수공업 하는 데 들어가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로 그저 만족해야 하는. 재워주는 것도 가게에 간이침대 놓고 거기서 자는 거야. 가끔 용돈 1~2만 원 주고. 기술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노예 같은 생활을 시킨 거죠."(이태곤 1차 구술)

12) 참고로 신망애재활원은 1988년 독지가로부터 기부받은 돈으로 청량리의 92평 대지에 복지관을 짓고자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 사건이 님비현상으로 주목 받으면서 울림터 등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들이 '신망애 투쟁'에 적극 결합하게 된다. 그러나 신망애복지관 건립은 끝내 무산되었고, 경기도 마석으로 쫓겨나야만 했다. 이후 신망애재활원은 대형 복지법인으로 성장했는데, 설립자인 김양원 목사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직후, 그가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졌던 장애인 강제 불임수술 등 인권침해 문제가 폭로되기도 했다(민중언론 참세상 2008/10/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합쳐가지고 권력하고도 싸우고, 가게 주인하고도 싸우"면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조성남 1차 구술). 동료들과의 연대 속에서 노점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아들로부터 "우리 친구 아빠들은 회사 갔다오면 만 원짜리가 많은데 아빠는 왜 동전하고 천 원짜리뿐이야?"라는 질문을 받아야 했던 구걸 장애인이 "우리 애 학교에서 가정형편 조사 같은 것을 시키면 이제는 자영업이라고 쓸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변화를 만들었다(함께걸음 1996/01).

장자추 초기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박홍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장자추에 의미 부여를 했다고 한다. "생계를 같이 하면서 같이 돈 벌어서 같이 일정 정도 분배를 하고, 그리고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50명만 있으면 장애인계에서는 혁명이다. 우리 50명만 조직하자"(조성남 1차 구술). 말하자면 일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꾸려가는 '경제 공동체'를 구상했던 것이다. 물론 이런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된 적은 없고, 그저 사적인 자리에서 회원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 한 말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런 지향은 장자추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된 '암묵적 목표'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에 대해 당시 장자추 회원이었던 한 구술자는 박홍수가 노점활동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기보다는 장애인이 중심이 된 대안 공동체로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이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대우를 해주는 모범 공장을 구상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종환 3차 구술).

그러나 노점상의 세계는 이상적인 공동체로만 꿈꾸기에는 너무나 치열하고 살벌한 곳이었다. 장자추는 장애인 1명과 비장애인 1명이 2인 1

조를 구성해 노점 하나를 책임지는 식으로 장사를 했고, 중국에서 싼 값에 수입되는 일상 생활용품들을 주로 팔았다. 이 일상의 터전을 지키는 과정은 매일 매일이 전쟁이었다. 1995년 한 해에만 노점 확보 투쟁 과정에서 8명이 구속되고 8명이 불구속될 정도였다(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2002, 11).

> 구술자: 주말에는 그 앞에 가게들이 문을 닫으니까 힘없는 떴다방들이 들어와서 거기다 가게 앞이고 도로고 막 늘어놓고 팔다가, (가게) 장사할 때는 (떴다방이) 장사를 못 하고 이 사람들도 고물 주우러 다니는 거야. 중고물품 주워다 팔려고. 그런데를 우리가 주중이고 주말이고 그냥 다 해버린 거지.
>
> 면담자: 그러면 그 앞에 건물에 들어와 있는 상가들하고 싸움이?
>
> 구술자: 상가들하고 엄청 싸웠죠. 구청에서 단속 나와서 계속 싸우고. (…) 매일 같이 전쟁이었어요, 단속반들하고. 그러니까 적이 세 개야. 상가 주인, 떴다방, 그 다음에 구청 단속반. 전쟁터였지 전쟁터.(조성남 1차 구술)

장자추 활동은 이처럼 험난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 사실상 붕괴되어 있었던 장애인 운동의 대중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효과가 있었다. 당시 전장협의 대중사업으로는 장애아동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전문 잡지 『어깨동무』 발행, 새날도서관 운영, 자원활동팀 '또바기' 운영, 장애인 야간학교 '노들야학' 운영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투쟁 사안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대중사업에 가까웠다. 1996년에는 13박 14일 동안의 전국 순회 투쟁 형식으로 진행된 장애인고용촉진 걷기대회를 통해 노동권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고자 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나갈 현장의 주체를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2002). 반면 장자추 활동은 대중조직화와 투쟁 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거의 유일한 사업이었다. 장자추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노점 장사를 하면서 영세 장애인들을 조직화하는 한편, 구청의 단속과 철거에 맞선 투쟁도 병행해 나갔다. 이를 통해 장애인 생존권의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발판을 조금씩 만들어갔다.

장자추의 조직화는 인천 아암도 유원지까지 확대되어 1995년 6월에 장자추 아암도 지부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인천시와 연수구는 이들이 노점을 시작하자마자 철거 계획을 세웠다. 연수구는 폭력 철거로 악명이 높은 용역업체 '무창'과 계약을 맺고, 1995년 11월 24일 아침 7시 수천의 군, 경, 소방, 용역이 동원된 강제철거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경찰력과 포클레인을 동원해 위협하는 용역반원들을 피해 30여 명의 노점상들은 망루에 올라 저항을 계속했다. 다음날인 25일 저녁 농성자 11명이 망루 아래로 내려가 연행되었고, 망루 농성자 중 1명이었던 이덕인도 밤 8시 경 내려갔다. 그러나 그는 사흘 동안 실종 상태에 빠져 있다가 28일 오전에야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상의와 신발이 벗겨졌고, 두 손목이 밧줄에 묶여 있었으며, 어깨와 팔 등에 피멍이 들어 있었다. 그의 시신은 곧장 인천 세광병원을 거쳐 길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29일 새벽 경찰 1,500여 명이 영안실 콘크리트벽과 유리창을 뚫고 난입해 시신을 탈취하고 그의 형을 납치해 강제 입회시킨 가운데 부검을 실시했다. 이후 경찰은 서둘러 사인을 익사로 발표했다(비마이너 2019/10/22).

이 사건은 최정환 열사 투쟁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운동을 넘어선 민중운동 전체의 저항을 불러왔다. 11월 30일 노점상과 학생 등 1,000여 명이 인천시민회관에 모여 '장애인 노점상 故이덕인 열사 사인진상규명과 시신탈취 규탄대회'를 열었다. 12월 15일에는 유가족을 포함한 약 100여 명이 청와대를 항의방문 했으나, 공권력에 의해 모두 연행되었다. 이튿날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는 3,000여 명의 사회단체 회원 및 학생들이 모였고, 이덕인 열사 정국은 대정부 투쟁으로 확대되었다. '이덕인 열사 비대위'는 이듬해 1월 19일 제 민중단체와 함께 '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기도 했다(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2002, 98-99).

이덕인 열사 장례 투쟁은 5개월에 걸친 기나긴 싸움이었다. 초기에는 민중운동 제 진영이 연대하는 듯 했지만, 이 사안을 온전한 자기 과제로 받아들이고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조직은 없었다. 장애인 운동 조직의 역량만으로 감당하기는 버거웠으나, 장자추 집행위원장 박홍수는 5개월 동안 영안실에 상주하면서 비타협적인 장례 투쟁을 이끌었다. 그러나 1996년 4월 24일 장례를 치르기까지 정부는 물론 인천시, 경찰 관계자 누구도 이덕인의 죽음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장자추는 발족한 지 1년 만에 커다란 패배에 직면해야 했던 것이다.

장자추의 '패배'는 단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장자추는 전노련 측이 먼저 제안해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김종환 3차 구술, 조성남 1차 구술). 이를 고려하면 장자추의 출발은 장애인 운동의 전략적인 기획 아래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이었다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할 수 있다. 전장협 차원에서 장애인 노점상 운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외형적으로는 전장협과 전노련이 함께 운영하는 조직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지도력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게 확보한 회원이 전노련이 중심이 된 지도체계를 따르"거나, '빈민운동'이라는 영역의 생소함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전술이 생소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돌출되는 과정"들이 발생했다. 게다가 노점 자리 확보 과정에서의 마찰로 인해 성장협과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했다. 전장협은 성장협이 자신들의 노점사업을 방해하기도 했다면서, 이들의 사업 작풍이 "지도부의 이익으로만 한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2002, 210).

장자추는 열사 정국이라는 우연한 시대적 계기에 전노련의 제안에 의해 만들어졌고, 실제 활동 과정에서는 박홍수라는 개인의 리더십에 크게 의존하는 조직이었다. 박홍수는 울림터를 비롯한 학생운동권 출신이 중심이 된 기존 장애인 운동 그룹들과는 성향이 많이 다른 사람이었다. 물론 울림터 등과 교류가 있었지만, 그의 초창기 활동 기반은 서울장애자종합복지관 직업훈련 과정 졸업생 동문회 '싹틈'이었다. 그는 1989년도에 '싹틈' 회장으로 있으면서 졸업생 취업실태를 조사했는데, 응답자 58명 중 실제 취업이 된 경우는 21명(36.2%)에 불과했고,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복지관에서 배운 기술과 관련 없는 단순 조립공장 취업이나 시다로 고용된 경우가 허다했다(싹틈 1989). 그러나 조사 결과를 담은 소식지를 배포하려 하자 복지관이 이를 강제로 수거해 갔고, 박홍수는 이에 항의해 후

배들을 조직하여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박경석 1차 구술). 박홍수 자신도 평생을 가난과 싸워야 했던 영세 장애인이었다. 그는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허름한 슬러브 주택에 작은 구두 공장을 차려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 구두 공장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이곳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노동하면서 자립 기반을 만들고 장애인 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꿈을 꿨다(비마이너 2019/12/22). 물론 그 꿈이 당장 실천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몇 년 뒤 장자추를 통해 실행에 옮겨졌던 것이다. 박홍수는 이 새로운 활동의 터전에서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보다 "앵벌이 활동을 오래 하거나 깡패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설이 있는(성장협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_인용자)" 사람들과 오히려 마음을 터놓고 지냈다. 그는 "유난히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활동가, 그리고 진짜 친해지면 그런 사람들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는 활동가"로 기억되고 있다(비마이너 2019/12/23).

달리 말하면, 장자추는 기존의 1980년대를 상징하는 '민주화운동' 또는 '민중운동'의 감각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았던 도시 빈민, 영세 장애인의 감각과 즉자적인 욕구에 의해 추동된 조직이었다. 장애인 운동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그 전까지는 경증 장애를 가진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장애인들이 주도하는 운동이었던 반면, 장자추에 뛰어든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의 활동가들은 이 때 처음으로 장애 빈민의 문제를 자기 과제로 고민하게 되었다(조성남 2차 구술). 그러나 이런 활동 양식이 기존의 운동 문법에 녹아들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전장협의 일반적 분위기 역시 이를 조직적 과제로 상승시킬 조건이 되지 못했다. 전장협 내부에선 노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자리 확보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구청 단속반과의 싸움을 뒷수습 하는 데 역량을 소모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다(박경석 1차 구술). 이덕인 열사 장례 투쟁 과정 역시 전장협 내부에서 충분히 소통되지 못했다. 박홍수는 이 싸움에서 얻은 패배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후에는 술에 의존한 채 지내야만 했다(2001년 지병으로 사망). 결국 전장협 내부의 노점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1998년 전장협과 한국DPI의 통합 논의가 그 직접적인 계기였다.

3) 장애인 운동의 주류화와 장애인 노점상 운동의 소멸

전장협은 장애인 단체가 전반적으로 보수화하거나 시민운동 경향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사회 변혁 관점에서의 활동을 지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전국적인 지부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사단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했기에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압박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전장협 내부에서 한국DPI와의 통합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김도현 2007, 99). 한국DPI는 1981년 의사 및 재활 전문가 중심의 국제재활협회(Rehabilitation International, RI)에 반기를 들면서 등장한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의 한국지부이다. 한국DPI는 1986년에 결성되었으며, 소수 명망가 중심의 단체이긴 하나 국제적인 단체와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다(김도현 2012, 174).

통합을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는 의사 및 재활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는

전문가주의를 배격하면서 출범한 DPI의 이념 및 역사성과 국제적 인지도의 활용 가능성이었다. 또한 통합을 전제로 영입되는 A 씨[13]가 동원할 수 있었던 상당한 활동 자금도 무시할 수 없는 유인이었다. 전장협 내부에서는 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도부의 다수는 통합이 불가피하거나 새로운 전망을 가져다는 주는 것으로 여겼다. 결국 두 조직은 1998년 10월 17일에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한국DPI로의 통합을 결정했다. 통합과 함께 전장협 활동가 대다수가 서울DPI로 활동 공간을 이전했다(김도현 2007, 99-101). 이와 같은 통합 과정은 제도권 정치 세력 내에 장애인의 지분을 형성함으로써 장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1980년대 말에 형성되어 1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장애인 운동의 흐름이 제도화·주류화의 길로 급격하게 경로를 수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통합 과정에서 전장협이 그간 해온 사업들 중 많은 부분이 한국DPI로 온전히 이전되지 못했다. 통합 조직은 정부로부터 위탁 받는 수익 규모가 큰 사업을 맡거나 각 장애 부문별 사단법인 조직 건설 등 대정부 파트너가 되는 방향을 추구했다(박경석 1차 구술; 김병태 1차 구술). 따라서 이런 발전 전망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전장협 사업의 상당 부문이 '청산'의 대상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장자추의 노점상 운동은 최우선의 청산

13) 중증 장애인 당사자로서 1980년대 좌파 조직 운동의 이론가로 활동했으며, 1990년대 초 청년 장애인 조직 활동에 개입하다가 학업을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전장협과 한국DPI 통합 논의 시점에 귀국해 새로운 활동을 도모했으며, 통합 결정 후 서울DPI 회장을 맡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당시 전장협의 조직국장이었던 박경석은 통합 논의를 주도한 A씨가 장자추의 활동을 장애인 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장자추의 해산을 통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회고했다.

> (A씨가 장자추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이건 노점운동으로 가서 거기서 하고 장애인은 장애인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가야 된다라는 거지.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는 상설적인 기구거든요. 그런 기구는 현재적 조건에서 DPI로 갈 때 부담스럽다는 논리였어. (…) 조금 더 제도적 충실화, 국제활동을 하는 기구로 만들고 싶었던 거지. 맨날 (노점에서) 싸움 날 때마다 붙고, 청계천에 자리싸움 나면 거기 가서 붙어 앉아 있을라고 하면 (그들의 입장에선) 문제가 되지. 나는 (조직국장으로서) '그건 아니다. 이거 5년 동안 뼈 빠지게 만들어 놨는데 당신이 통합 하면서 이거 한 방에 말로 정리할 수 있냐. 나는 그거 동의 못 하겠다.'(박경석 1차 구술)

이와 관련해서 실제 장자추 활동을 했던 이들은 A씨와의 직접적인 언쟁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들은 A씨가 교조적인 마르크스주의 혁명론을 떠올리게 하는 논리를 피면서 장자추를 통합 조직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고 전한다.

> (A씨의 주장은) 이게 혁명의 시기가 되면 끝까지 버티는 놈들이 농민하고 프티(부르주아)들인데, 너네는 프티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게 말이 되냐고, 현대자동차에서 300만 원 받는 노동자하고 월 60만 원도 못 버는

노점상인 나하고, 누가 프티고 뭐고 그런 기준으로 잴 수 있냐' 따졌지. 그거를 30-40분 넘게 회의를 했어. 그 이야기만 가지고. 근데 (A 씨는) 절대 안 굽혀.(김종환 1차 구술)

A 씨가 노점상을 규정할 때, 너희는 프티 자본가다.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본의 변두리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혁명에 반대하는 프티 자본가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여기에서 열이 확 돌아서, 그럼 난 너네하고 못해,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도시 빈민 노점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상반된, 그러니까 도시 빈민 노점상의 파생부터 역사적 과정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거든. (…) 이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없이 노동운동으로 세상을 바꾼다?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조성남 1차 구술)

그러나 장자추 회원 및 일부 활동가를 제외하고는 A씨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통합이 이미 결정된 마당에 장자추의 존재는 빠른 통합 논의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여겨질 뿐이었다. 결국 장자추는 통합 조직 외부에 남게 되었고,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장사를 유지하기는 했으나 머지않아 다들 다른 생업을 찾아 흩어졌다.[14]

1995년 3월 최정환 열사 장례 투쟁을 시작으로 역사에 그 얼굴을 드러

14) 장자추뿐만 아니라, 당시 에바다복지회 시설 비리 투쟁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던 전장협 부설 노들장애인야학 역시 통합 이후 조직 체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독립을 택하게 된다(박경석 1차 구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냈던 '장애인 노점상 운동'은 그렇게 만 4년도 채 되지 않아 소멸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대안적 생존 방식을 고민하고 가장 밑바닥에서 장애인 운동의 터전을 만들고자 했던 장자추의 역사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갔다.

5. 결론

운동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1980년대'는 "위대한 각성의 시대"(김진균)라고 일컬어진다. 이 시대는 그 전까지 신학적 상상력의 장에서 위치 지워진 고난과 한의 상징인 민중을 '계급 주체'로 재발명한 시점이었다(김원 2013, 15). 1980년대 청년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장애인 운동 역시 하나의 '계급 주체'로서 장애인을 호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의 대다수 '영세 장애인'들은 계급이 되기에는 너무나 미약했다. 그들은 1980년대 민중운동이 상정한 기본적인 계급 대립 구도인 '노-자 관계'에 진입할 자격조차 갖지 못한 이들이었다. 이 때문에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은 자조적인 호명으로 스스로를 '기생적 소비 계층'으로 불렀다. 그러나 '기생적 소비 계층'의 운동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고 어떤 실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을 갖지 못했다. 당시 장애인 운동의 시야 안에서는 장애인을 노동시장 내부의 '노동자'로 편입시킬 것을 요구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운동이 최선이었다.

'기생적 소비 계층'의 외침은 오히려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 바깥에서

터져 나왔다. 그 외침이 표면화된 사건이 본문에서 소개한 '앵벌이 사태'였다. 이 사건은 비록 지장협이라는 거대 단체와의 이권 다툼의 양상으로 비춰지기도 했으나, 구걸·행상으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독자적인 요구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최초의 계기이기도 했다. 이 사건에 의해 비로소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도 영세 장애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접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후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은 최정환·이덕인 열사 투쟁이라는, 1990년대 전체 민중운동의 시야에서 볼 때에도 가장 치열했던 국면을 살아냈고, 그 중심에는 노점을 통해 장애인 생존권의 대안을 찾고자 했던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가 있었다. 그러나 장자추는 전체 장애인 운동의 주류화·제도화라는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멸될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물론 장자추 소멸의 원인이 단지 장애인 운동의 주류화·제도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구걸, 행상, 앵벌이의 조건보다는 좀 낫다고 하더라도, 노점 역시 행인들의 시혜와 동정 또는 멸시와 냉대를 감내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게다가 도시 미관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노점 탄압을 일삼는 구청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생계 수단으로서의 노점상'은 애초에 지속 가능성이 낮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생존의 방편을 찾기 어려웠던 노동시장 바깥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과 연대의 근거지를 마련하면서 정치사회적 주체로 거듭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한국 장애인 운동사 서술에 있어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그간 주요 장애인 단체들 내부에서 한국 장애인 운동사를 정리해 온 방식을 돌아보면, 장애인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전국단위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들 간의 논쟁과 갈등의 역사였다. 이는 특히 '장애인 당사자 단체'냐 '장애인을 위한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의) 단체'냐를 두고 서로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이른바 '당사자주의' 논쟁으로 수년 째 지속되고 있다(유동철 2017). 그러나 이런 논쟁은 사실 장애인 단체가 정부 및 제도권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이익을 둘러싸고 벌이는 공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랑시에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지배질서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은 이들끼리 몫을 분배하는 '치안으로서의 정치'에 가깝다(랑시에르 2008). 이러한 역사 서술과 공식 기억의 장 속에서는 그간 비가시화 되었던 장애인들이 어떻게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정치사회적인 주체로 거듭났는지를 밝히고, 이를 어떻게 현재의 운동 속에서 살려낼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장애인 운동 내에서조차 '몫'을 배분받을 주체로서 인정되지 않았던 거리의 영세 장애인들은 너무나 손쉽게 역사적 기억에서 지워졌던 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장애인 운동은 이동권, 교육권, 활동 보조 서비스 제도화 등 다양한 투쟁에서 성과를 보이며 새로운 부흥을 맞았다. 첫 신호탄은 2001년 1월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 리프트 추락 참사'에 대한 중증 장애인들의 지하철 선로 점거 등을 통한 항의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도입 등을 촉구하는 새로운 대중운동의 전개였다. 이는 1990년대 '장애인 운동의 침체기'를 끝내고, 중증장애인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운동도 출현했다. 이 움직임을 촉발한 것은 1980년대 후반에는 울림터 회원이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장자추에서 노점 장사를 하기도 했던, 중증장애 여성 최옥란의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단식 농성(2001년 12월)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듬해 3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끝이 났지만, 그녀가 남긴 숙제는 '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폐지 투쟁'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장자추의 활동은 1990년대 장애인 운동의 침체기와 2000년대의 부흥기 사이에 끼어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장애인이 '기생적 소비 계층'이라는 자기 비하적 언어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생존의 대안과 해방의 구체적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시도였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기존 청년 장애인 운동 조직의 활동가들도 진짜 '밑바닥' 삶을 사는 영세 장애인의 문제를 절실하게 깨닫고 자기 운동의 과제로 삼게 되었다. 장자추의 활동은 장애인 운동의 전망을 찾을 수 없던 어두운 시절에 노동시장에서 '착취당할 자격' 조차 얻지 못했던 가난한 장애인과 함께 싸웠던 '위대한 패배'였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가난한 장애인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장애인 운동이 나아갈 바를 고민하는 출발점으로서 영세 장애인의 외침과 투쟁, 그리고 장자추의 역사를 복원하고 기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참고문헌

김도현. 2007.『차별에 저항하라 - 한국의 장애인 운동 20년』. 서울: 박종철출판사.

_____. 2012. “장애인 당사자주의 비판적 이해를 위하여.”『진보평론』52호. 172-190.

김원. 2013. “‘장기 80년대’ 주체에 대한 단상 : 보편, 재현 그리고 윤리.”『실천문학』111호. 14-30.

김윤정. 1997.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랑시에르, 자크. 2008.『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서울: 도서출판 길.

박은영. 2016. “한국 원호정책의 전개와 정치적 활용(1948-1963).” 연세대 사학과 석사논문.

빈민운동사 발간위원회. 2017.『마을공동체 운동의 원형을 찾아서』. 서울: 한울.

싹틈. 1989. “싹틈동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장애의 문제와 동문들의 취업과 직업훈련의 문제점.”『싹틈』1989년 5-6월호.

유동철. 2017. “연대와 갈등사이, 한국장애인운동사.” 한국장애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이임하. 2011.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중앙사론』33집. 323-347.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 1993.『울림터 활동기록집(1986년~1992년)』.

_____. 1986. “장애자 복지이념의 구현은 사회 제 모순구조와의 타협 없는 투쟁에서.” 울림터 소식지『함성』제1호(출처 :『울림터 활동기록집』. 176-182).

_____. 1987a. “‘5·26 장애자 시위’의 단상.” 울림터 소식지『함성』제3호(출처:『울림터 활동기록집』. 196-197).

_____. 1987b. “한국 사회운동과 장애자운동.” 울림터 소식지『함성』제4호(출처:『울림터 활동기록집』. 198-202).

_____. 1988a. “서울·경기지역 장애인 단체협의회 성명서.” 1988.04.16.(출처:『울림터 활동기록집』. 62-63).

_____. 1988b. “서울지역 사회사업·사회복지학과 대표자 협의회 성명서.” 1988.10.09.(출처:『울림터 활동기록집』. 82-83).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1995. “최정환 열사 분신관련 투쟁 평가서.”

_____. 2002.『전장협 활동기록집: 장애해방 그 한길로!』.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1994.『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6.『한국지체장애인협회 30년사: 장애인 당사자주의로 이룩한 도전의 역사, 1986-2016』. 서울: 새보람.

경향신문. 1991/09/09. "'앵벌이' 전문회사 적발."
_____. 1991/09/25. "장애인 강제수용 갈취."
국민일보. 2013/01/28. "육영수 여사, 장애인 시설 정립회관 물심양면 지원."
동아일보. 1991/10/24. "실종어린이찾기 전국 일제검문 폭력범등 6만여명 적발."
비마이너. 2019/10/22. "[이덕인①] 그날의 아암도."
_____. 2019/12/22. "[박홍수 ③] 변방에서, 혁명의 물리적 근거를 위하여."
_____. 2019/12/23. "[박홍수 ④] 죽음의 행렬,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복수."
에이블뉴스. 2008/04/28. "공무원 출신 장애인개발원장 결사반대."
장애인복지신문. 합본호(1989~1999년)
_____. 1991/10/04. "사설 - 구걸·행상 장애인 무차별 연행 즉각 중단하라."
_____. 1991/10/18. "겨울채비에 속 태우는 행상·구걸 장애인."
_____. 1991/11/29. "장기철 그는 누구인가?"
_____. 1992/01/31. "앵벌이 폭력단속에 항의 22일 구로구청서 피해보상·공개사과 요구."
_____. 1992/07/03. "50대 장애인노점상 단속항의 자살."
_____. 1992/07/10. "7일 보라매공원 박승학씨 살인규탄집회 2백여명 참석."
_____. 1993/05/14. "M.L.M의 장애인계 침투 실태 전모."
조선일보. 1984/09/22. "서울 거리「턱」을 없애주시오."
중앙일보. 1981/04/27. "경연 아닌 축제 중심으로「국풍81」."
참세상. 2008/10/13. "시설보조금 횡령한 사람이 시설 비리 감시하나."
한겨레. 1991/09/26. "'장애인 금품갈취' 수사 의뢰 장기철씨 인터뷰."
함께걸음. 합본호(1988~1994년),
_____. 1990/08. "장애우가 버려져야만 하는 사회." 30-33.
_____. 1990/11. "서울지하철 신문판매의 허와 실." 20-27.
_____. 1991/05. "야시장을 둘러싼 의혹. "4-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_____. 1991/12. “행상 장애우들 분노 폭발 지체장애자협회 점거 농성.” 4.

_____. 1992/01. “지체장애자협회가 추진한 사업들.” 10.

_____. 1992/01. “현장 - 계속되는 영세 장애우의 함성.” 48.

_____. 1992/09. “신체장애인복지회와 천안 땅 30억에 얽힌 의혹. ”16-25.

_____. 1993/03~05. “사람사는 이야기 - 빈민장애우 심의섭.”

_____. 1996/01. “르뽀 -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MBC PD수첩. 1991/11/19. “뜬소문에 생계막막.”

Abstract

Where Have the Cries of Disabled Panhandlers Gone

The Problems of Destitute Disabled People in the 80-90s and the Responses of the Disability Movement

Ha, Keum Chul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h.D. Course

The main interest of Korea's disability movement was the disabled people's right to work, which materialized as their demand to enact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Promotion Act. However, although this bill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1989, only a small number of disabled people were eligible for its benefits, and most of the destitute disabled people had to make a living in the informal economy outside the labor market. Yet, the problem of destitute disabled people, who appeared in newspapers as panhandlers, peddlers, street vendors, night market sellers, and newspaper salesperson, etc., was not the main concern of the disability movement. What spurred the social attention on destitute disabled people was the request made by the chairman of the Korea Association of Physically Handicapped Persons to the police in September 1991 to investigate the existence of gangs that extort disabled panhandlers, which led to a large-scale crackdown on panhandlers. This incident caused a strong backlash from the Korean Independent Welfare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which was the base organization of peddlers and beggars, and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for organizations for disabled youth to build a solidarity over the problem of destitute disabled people. After the struggle surrounding the funeral of Choi Jung-hwan, a disabled street vend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who put himself on fire for the cause, in 1995, the issue of the destitute disabled people emerged as the core agenda of the disability movement, and the street vendor movement organization of the disabled called the Disability Independence Promotion Committee was formed. However, these attempts came to a halt at their early stages amid the rapid institutionalization and mainstreaming of the disability movement in the late 1990s.

■ **Keywords:** Destitute Disable People, Parasitic Consumer Class, Panhandler Incident, Street Vendor Movement of the Disabled, Disability Independence Promotion Committee

투고: 2020/03/18 심사: 2020/04/21 확정: 2020/05/21